



제주4·3의 아픔, 비설(飛雪) 1949년 1월 6일, 봉개동 지역에 토벌 작전이 펼쳐지면서 당시 25세 변병생과 그녀의 두 살배기 딸은 피신 도중 희생되었고, 눈더미 속에서 모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모녀상은 제주4·3평화공원에 있다. / 사진 이창훈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구 1명·비례대표 1명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지난 4월 15일 본회의를 열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을 현행 31명에서 33명으로, 비례대표를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 32명, 비례대표 8명으로 수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이례적으로 부칙이 추가됐다. 6·1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부칙은 개정안 공포 후 2일 내 선거구를 확정하고, 그 후 9일 내 관련 조례 개정까지 끝내도록 규정했



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20일 공포될 경우 22일 까지 선거구를 확정하고, 29일까지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3회 임시회가 3월 30일 폐회했다.

본회의에서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가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타 시도 광역의회보다 많은 권한을 활용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2면

지면 안내

제403회 임시회 폐회 ▶ 2



주요 이슈 ▶ 3

함께 합시다 ▶ 6~7

사무처 소식 ▶ 8

“희생자와 유족들, 명예 회복의 새 진전 맞게 됐다”



제403회 임시회 폐회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월 30일 “비록 저는 떠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로 꼭 다시 돌아오셔서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미래 제주발전과 진정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6·1지방선거 선전을 기원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제403회 임시회 폐회사를 끝으로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 막을 내렸다.

좌남수 의장은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그동안 장기간 도지사 공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수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까지 투철

한 책임감으로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도내 농업인들은 최근 농자재 가격의 급상승과 양파 가격 폭락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원책이 절실한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도정에 당부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도의원 증원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특히 제주의 경우 분구 대상 선거구가 두 곳에 이르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어제(29일) 진행된 제주4·3수형인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평생의 한을 풀고 명예 회복의 새 진전을 맞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좌 의장은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서도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일선 학교와 교육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제적인 학교 방역과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해오셨다”며, “이뿐만이 아니라 IB 교육, 제주형 자율학교를 비롯해 예술계열 학교 운영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변화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들이 수능 12년 연속 1위, 4·3 평화인권 교육의 전국화,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이라는 성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본다”고 높이 치하했다.

끝으로 “우리 도의회는 도지사에는 못 미치지만 타 시도의회에 비하면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도의회가 지닌 강력한 권한을 십분 활용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4·3수형인 직권재심 무죄 판결 환영”

4·3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가 4·3 당시 불법 군사 재판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은 4·3수형인의 직권재심 무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모두 4·3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있을 재심에서도 4·3희생

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3월 29일 검찰의 청구로 열린 사상 첫 직권재심 공판에서 대상자 40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4·3특별위원회는 “이번 무죄판결은 국민과 역사 앞에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투명하게 밝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 사진제공: 제주지방법원 출입기자단

부여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70년 넘게 억울한 세월을 버텨온 희

생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4·3특별법 개정’ 기념 동백나무 식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4월 1일 제74회 4·3 희생자추념일을 맞이하여 지난해 4·3특

별법 개정을 기념하는 동백나무 식수 행사를 의원회관 남쪽 화단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황국 원내대표, 4·3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개회선언, 인사말씀, 식수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목인 동백나무는 그 꽃이 겨울에 피어 4월이면 특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4·3 당시 힘없이 스러져간 희생자들을 연상시켜 4·3을 상징해 왔다.

좌남수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을 기념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동백나무를 심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준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을 비롯한 4·3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도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보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추가 진상조사, 직권재심 추진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족회 및 도와 협력하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제12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

강시백, 김장영, 김태석, 박은경, 오대익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3월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2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강시백, 김장영, 김태석, 박은경, 오대익 의원에게 시상했다.

의원들은 제주 교육자치의 미래를 지향하는 리더십 활동,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제시 및 지역일꾼으로 제주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하는 의정활동 등 도민의 의견을 귀 기울이는 도민 우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한 우수 의원을 선발해 시상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수상의원들에게 “의정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11대 도의회가 더욱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 중단 요청

문화관광체육위, 관련 입장문 채택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안전으로 상정, 3월 30일 제403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2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8년부터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약 100억 원(세금포함 약 113억)에 매입, 60억 이상 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 공연연습장 및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계약금 2원, 계약해지 위약금 20억 원’이라는 상식에서 벗어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점은 상임위를 통해 수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이날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안전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며 관련 안전 내용을 밝혔다.

상임위는 “재밋섬 건물을 매입 활용하고자 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사업임에도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누락,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기금 등 기본재산 운영관리의 부적정, 도민사회 공감대 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해당 안전을 원안 가결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촉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4월 1일 제403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도의원 3명을 비롯해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추천 및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위촉식에서 좌남수 의장은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결산이 더 중요하다”며, “결산은 새해 예산심사의 기초 자료로, 불요불급한 예산, 적법하지 못한 예산, 선심성 예산 등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중요한 여과장치”라고 강조했다.

위촉식 후 열린 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는 안창남 위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선임됐고, 간사위원으로는 고인자 위원(전직 공무원)

이)가 선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는 4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 25일간 실시되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적법하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등 지난 1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검사 세부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이 제대로 시정 및 개선되었는지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위원회 및 교섭단체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도의회 상임위 재편 다음 의회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6개 상임위원회 업무를 재조정 및 재편하는 방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3월 30일 제403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조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당초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가결한

이번 상임위 조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는 특별자치행정위원회로 ▲환경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위원회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환경위원회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보건복지미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정된 상임위 조정안은 재석 31명에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반대표가 과반을 넘김에 따라 해당 상임위 조정안은 부결되어, 다음 의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양돈산업, 제주 청정가치와 공존해야”

가축분뇨 관리 조례개정 공청회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주관으로 3월 30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주도했으며, 주제발표로는 강진영 박사(제주연구원 연구위원)가 ‘가축분뇨 관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송창권 의원은 “양돈산업이 제주 경제를 이끄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주의 청정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제주 청정의 가치에 맞는 조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강진영 연구위원은 “양돈산업이 환경의 오염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강도(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

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조례 개정 내용 중 행정처분 사항이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어 공공처리시설 및 그 외 정화시설 운영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환경마케팅시대에 요구되는 양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가축분뇨처리,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의 정도가 도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그 경증을 따져 현실적인 행정처분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경력단절 여성 중심 마을 보육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월 30일 제2회의실에서 ‘지역 인력을 활용한 마을 보육과 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자녀의 보육과 교육문제로 인해 경력 단절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경력이음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의 유휴공간과 경력단절된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여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를 공동주관한 정민구 의원은 “도내 맞벌이 가정 비율이 2021년 기준 6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력단절 비율이 높아가는 데에는 30대와 40대의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며,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별도의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길호 의원은 “경력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중년 여성의 공동체 활동과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여 창업과 재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경



제조직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경력보유여성 등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임신과 육아에 기여한 여성의 경력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경력인정서를 발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전세버스 위기극복 위해 안전운임제 도입”



제주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의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4월 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버스 요금 현실화를 통한 제주관광의 질적성장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손 연구원은 “제주 전세버스는 지난 2016년 2,275대에서 2020년 1,832대까지 줄었고 운수종사자도 2015년 2,169명에서 1,468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하루 가동률은 코로나19 이후 이용이 급감해 2016년 48.5%, 2019년 35.6%에서 지난해 9.4%까지 떨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손 연구원은 “제주 전세버스 위기 극복을 위해 안전운임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최소한의 안전과 임금 및

이윤을 보장하고 업체 간 서비스 및 안전 관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 전세버스는 타지역에 비해 운행거리가 길지 않다. 경유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대기시간은 길다는 특성이 있다”며 “장래 여건 변화에도 활용될 수 있는 운임 체계를 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전한 운송서비스 담보를 위해서는 가동률에 따라 안전운임을 정하는 방안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등록대수 감소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위한 '생태법인' 활용 모색

보건복지안전위원회(양영식 위원장)와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는 4월 7일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 활용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해양오염과 무분별한 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학계에서 최근 제기된 생태법인 제도를 활용해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법 입법자료 과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론회에서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장수진 박사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현황 발표가 있었으며, 제1주제발표는 생태법인 연구자인 진희중 박사의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의 의의'를, 그리고 제2주제발표에서는 영산대 박규환 교수의 '생태법인의 헌법적 판단과 특별입법의 실용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홍명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참여환경연대, JIBS방

송국, 한겨레신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주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



김경학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도내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 통합발달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조례에 의하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

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지원하며,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지키는 데 집중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본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김경학 의원은 "영유아기에는 발달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특히 뇌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로서 발달 지연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발달 지연은 가속화되고, 발달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양병우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사진.무소속, 대정읍)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료취약 읍면지역에 휴일·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의원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은 서귀포시 대정읍에 전국 최초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의 인구수,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 수요, 응급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양병우 의원은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 설치·운영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시, 특히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모델인 서귀포시 대정읍에 설치될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성공적으로 정착 및 운영되어 이를 발판 삼아 대정읍뿐만 아니라 도내 의료취약지인 읍·면·동의 의료 불평등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Q&A



Q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지역민 또는 특정단체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 반영을 예산 편성 부처의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A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보조금, 장려금 등 배정, 지원 등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예산편성, 심의는 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산편성, 심의가 아니라,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 등을 할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활 & 법령뉴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Q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명령
- ③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배출시설(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기한 제주어 ⑩

윤지다

(형용사) 동물의 새끼나 식물의 새싹 등이 미끈하고 건강한 상태로 있다.

<예문>

올리 수월은 하늘이 춤뿐았다.

식물덜토 윤지게 풀을 번고 베라벨 꽃덜토 반득반득하고 지락지락하게 돌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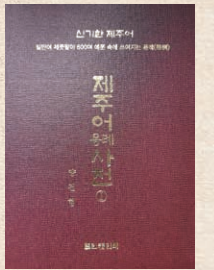
“자이 누게고? 잘도 뿌른 선수여이”

“경영혹과 수혹년 남갑돌이라고예. 가달에 오도바이 돌린 생이우다. 다음돌

도민체전광 그 다음돌 전국체전까지 나갈만 후우다양”

“기록도 넘어 좋음직후고이 히야, 제라흔 선수가 나온 거 답다”

- 올리 : 올해 / · 수월 : 사월
- 춤 : 참 / · 뿐었다 : 맑았다
- 풀 : 팔 / · 번다 : 뻗어나가 펼쳐지다
- 베라벨 : 별별
- 반득반득하다, 반뎡반뎡하다, 반뎡뎡하다
- 질서정연하고 뚜렷하다
- 지락지락하다, 자락자락하다
- 주렁주렁 많이 달린 모양
- 자이 : 저 애 / · 누게고? : 누구니?
- 가달 : 다리 / · 오도바이 : 오토바이
- 돌린 : 달린
- 생이우다 : 모양입니다
- 후우다 : 합니다 / · 넘어 : 너무
- 좋음직후고 : 좋을 것 같고
- 제라흔, 제라진 : 멋있는, 제대로 갖춰진
- 답다 : 닳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0회	총 141일 ·정례회 2회/58일 ·임시회 8회/83일	본회의 33일 상임위 54일 예결위 18일 공휴일 36일	
2월	제402회 임시회	2.8.(화) ~2.1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3월	제403회 임시회	3.22.(화) ~3.30.(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4월				
5월				
6월	제404회 임시회	6.14.(화) ~6.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7월 ~ 8월	제405회 임시회	7.1.(금) ~7.6.(수) (6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공휴일 2일	·의장·부의장 선거 ·제12대 의회 개원식 ·원구성 등
	제406회 임시회	7.12.(화) ~7.22.(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2일	·주요업무보고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제407회 임시회	7.26.(화) ~8.5.(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공휴일 2일	·제1회 추경예산안
9월	제408회 제1차 정례회	9.16.(금) ~10.12.(수) (27일)	본회의 8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공휴일 10일	·도정·교육 행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10월	제409회 임시회	10.18.(화) ~11. 9.(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행정사무감사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10회 제2차 정례회	11.15.(화) ~12.15.(목) (31일)	본회의 8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도정·교육 행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12월	제411회 임시회	12.19.(월) ~12.23.(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제2회 추경예산안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9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창업 활성화 통한 균형 발전 도모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 왔다.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해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민선 7기 제주도정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했다.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신규채용이 축소돼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스타트업 베이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혁



임정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신 창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수 청년 인재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스타트업 베이를 적극 유치했다. 창업은 1차 산업 및 서비스업 위주로 형성된 기존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지식산업 등으로 산업구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스타트업 베이 운영 성과
서귀포시 창업 시장 활기
'스타트업 타운' 건립 예정
안정 정착·성장 기반 돼야

스타트업 베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예비창업을 포함해 50개 기업을 지원하며 매출 261억 원, 148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124개 기업을 지원해 매출 364억 원, 222명 고용창출, 13건의 벤처기업 인증 등의 성과를 이뤘다. 올해에도 48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등 서귀포 지역 내에서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가 스타트업 베이를 유치할 당시 제주도내 창업보육센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창업 인프라는 제주시에 편중돼 있었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스타트업 베이를 유치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서귀포 지역에서도 창업 생태계가 조성됐다. 창업자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업 활동을 진행했다. 행정에서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너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과 청년이 '민심'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정당이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 의원 역시 작년 10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주최한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30% 이상 여성비공천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오영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역 정치에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고 획기적인 권고가 아닐 수 없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톰 피터스(Tom Peters)는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동등한 정치 참여 보장을
획기적인 공천 혁신 필요

답지 않으면, 아주 명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의회인 제주도의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정책결정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다. 제주도는 도민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경제활

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11대 의회 전체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8.6%(43명 중 8명),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9.6%(31명 중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점차 지역구에서 여성의원 당선 비율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세대별 대표성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MZ세대(MZ generation)로 불리는 2030 청년세대 당사자들의 의회 진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톰 피터스의 경고처럼 제주가 '아주 명칭한 의사결정'의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6·1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세대의 정치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4월, 우리 가슴속 동백꽃을 품는다

4월이 되니 마치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듯 벚꽃이 흐드러지고 동백꽃은 빨갛게 피었다. 아름다운 봄날인 지난 4월 3일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제주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봉행되었다.

올해 추념식은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다. 지난 4·3특별법 개정으로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보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 처음 경험해보는 추념식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치열하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지 몸소 알게 되었다.



박은영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아직 찬 바람이 부는 제주4·3평화공원에서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의 기대감을 보았고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추념식 때 영령들에게 약속드린 게 있다.

지난해 4·3특별법 개정
4·3 완전 해결 이제 시작

최선을 다해 영령님들의 아픔을 덜어 드리겠다고.

우리들에게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 입은 4·3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4·3희생자

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한 분도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다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사건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장기간 제주도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이다.

4월, 한 달간은 우리 모두 가슴속 동백꽃 하나 고이 품어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줬으면 한다.

비대면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제주도의회-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4월 8일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비대면(ZOOM)을 통해 양 의회 간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도의회에서 좌남수 의장, 정민구 제1부위원장, 강연호 제2부위원장, 김용범 운영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왕계요 주임, 예화 부주임, 왕천위 비서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의회는 지역

공동 발전과 협력, 국제회의·축제 등 대표단 상호 파견, 경제·문화·환경보호 분야에 적극 협의 및 참여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의향서 체결식 자리에서,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고, 제주와 다롄시가 20여 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가 오늘 협약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다”며, “실질적인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이 이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안 10건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4월 6일 충남 태안군에서 2022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안 10건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자는 데 시도 의장협회는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의회 발전과제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결과와 지난해 11월 25일 제7차 임시회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회신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채택된 주요 건의안은 농어민 수

당 국가정책화 건의안, 울진·삼척 산불지역 주민보상 및 피해방지·복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특히 점점 심화되는 지역 간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어민 수당’의 국가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시대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됨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달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CPTPP 가입 반대 결의문 채택 요구안 접수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4월 8일 의장실에서 제주지역 농·어·민단체로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요구안을 접수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정자문위원 의견 청취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3월 25일 소회의실에서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처리안건 및 처리예정인 안건과 농·어업, 지역경제 등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길호 위원장은 “의정자문위원님들로부터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으로 활

동에 제약이 많아서 아쉬움도 많았다”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오늘 회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문제점과 월동채소 가격안정 방안,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교육전문위원에 백혜선 연구위원 임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에 백혜선 정책연구위원이 임용됐다.

백혜선(사진) 정책연구위원은 최근 진행된 지방서기관(4급) 개방형직위 일반임기제(교

육전문위원) 공개모집에서 최종 합격, 4월 1일 자로 임용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백혜선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책자문위원(현 정책연구위원) 1기 출신이다. 교육전문위원에 임용되기 전까지 줄곧 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해왔다.

